불황을 헤쳐나가는 자구노력에 찬물 끼얹지 말아야…

본지 · 김한웅 상무

유럽 발 금융위기로 나라 전체가 혼란을 겪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이라니 불황의 장기화 조짐으로 가뜩이나 심상치 않은 업계의 분위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느낌이다.

전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닭고기 업계는 불황은 생산량의 증가와 경제위기에 따른 닭고기 소비감소, 그리고 닭고기 수입량의 증가 등 악재란 악재는 골고루 동반된 모습이다.

더욱이 윤달로 복이 늦어진데다가 올림픽 특수와 겹쳐 복(伏)경기마저 그리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다보니 닭고기 업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침체돼 있다.

또한 올 상반기에 과잉 입식된 종계마저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용계 병아리 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한해 전체가 가시밭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계열업체에서는 사육비 조정에 들어갔다.

불황이 시작되기 전 산업의 성장세와는 달리 농가를 확보하지 못해 매년 농가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닭고기 업체는 농가확보를 위해 무리한 경쟁을 벌여왔다.

그 와중에서 농가에 지원했던 사육경비 중 일부를 소속 계약농가와의 협의를 거쳐 줄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마냥 흐뭇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모 연구소에서는 "계약방식에 따른 사육비 적정성 연구" 연구 용역보고서를 내놨다. 어떤 의도로 이 시기에 이런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는지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미래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사실에 입각한 근거를 가지고 공정한 입장에서 형평성을 가지

고 연구 조사돼야 한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해, 또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의 경우 계열주체와 농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산업이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다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이견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 대립도 타협을 오가면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다.

옛말에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다. 알아서 대우해주고 챙겨주면 이상적이지만 닭고기 산업의 여건이 그렇게 녹녹치 않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두 번째가 '20년 전에 주던 사육수수료가 지금도 그대로' 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과거에는 기본 수수료 이외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류대, 깔짚비, 상차비용 등등 생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보너스 제도를 도입,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보고서의 가장 핵심인 농가 소득에 관련된 것이다.

kg당 평균 보수가 기본 사육보수는 146원, 각종 보너스 50.6원, 생산자재 보조비 103.1원 등 총 299.7원이며, 이중 생산자재 보조비와 부족한 보조비 86원을 빼면 결국 농가소득은 kg당 110.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슨 근거로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생산보조비 부족분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농가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괴리일 뿐이다.

또한 평균 사육수수 40,000수, 연간 5회전으로 연소득이 33,180천원 정도면 현재는 하위 그룹 20~30% 정도의 평균 수준으로 전국 축산농가 평균 소득(45,780천원), 도시가계소득(50,960천원)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국 축산농가 평균소득이나 도시가계소득이 비교의 대상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이를 십분 인정한다고 해도 현실과 왜곡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2011년도 기준 A사의 농가 평균 수치를 보면 kg당 평균 수수료는 306.8원, 사육규모는 5만6천수, 사육회전수 5.8회전, 출하체중 1.59kg으로 수취한 사육경비의 63%를 생산자재 보조비라 쳐도 57,117천원이 순이익이다.

가뜩이나 FTA 발효 등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닭고기 업계의 자구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